

순천 연향동 K아파트 주차비 징수 논란

순천 연향동 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수 차량 주차비 징수' 정책을 오히려 입주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94년 준공한 이곳 아파트는 8개동에 총 7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1268대가 등록돼 있다.

주차공간은 730대를 넘고 있어, 주차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최근 입주자대표들은 회의를 거쳐 '다수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징수하고 수익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차량 스티커를 교부중이다. 현재 각 세대에 방송을 통해 주차비 징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주차비는 차량 2대를 소유하는

2대 5000원 · 3대 10000원 등 부과 '주민 부담' 입주자대표 자질론 도마...관리실 개인 사무실로

세대는 매월 5000원, 3대는 10000원, 4대는 20000원이다. 차량 1대 이하는 한대당 5000원씩 주차비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들은 '주차비 징수'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연향동 D 아파트는 입주자 50% 이상 동의를 거쳐 시행중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 대표 회의만을 거쳐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결정에 상당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최근 맞벌이 부부

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및 자녀 통학 등에 의해 대부분 최소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인데 여기에 매월 최소 5000원, 10000원 이상 주차비 징수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 B씨는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교차 등대로 9명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입주자대표 김모 회장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자질론이 불거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취임한 김 회장은 아파트 관리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직원들은 바로 옆에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1월 입주자 회의를 거쳐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는 여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이어 관리소장 나이도 연령 규약을 벗어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취임한 후 관리소장과 직원이 모두 교체돼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현재 세대 방송을 통해 주차비 징수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모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편의점 종업원 쫓아가 강도짓 30대 검거

목포경찰서는 24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목포시 한 편의점 주변 공터에서 종업원 A(47·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흉기를 걸듯 주머니에 숨긴 채 영업을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A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 최씨가 편의점과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걸음을 버린 것을 확인한 뒤 탐문 수사 11시간만에 전남 모 지역 PC방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성 신체 몰카 촬영 · 판매한 20대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해외 SNS에서 4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평균 10만~1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판매 수익금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 구매자를 찾고 있다.

만취상태로 교통사고 낸 30대 입건

만취 상태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강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산타페 SUV를 몰다 박모(22)씨가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SUV가 전복되고, K5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강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예산 꿀꺽' 30대 행정실 직원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기법상 국고손실 및 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이모(3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명의 계좌 3개에 보관된 예산을 무단 인출하고,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억18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부분이 개인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손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거액의 예산을 빚을 갚거나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막는 이른바 '뿔려마기' 방법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숨겼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회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연 논란' 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 본격 착공

수 개월 동안 미뤄져 왔던 광주 농성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가 본격 착공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4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집중호우시 침수사태를 빚었던 농성지하차도의 경사완화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기존 215m의 도로를 양 방향으로 각각 50여m 늘려 320m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8% 수준인 종단면 기울기도 2~3% 낮춘다.

이로 인해 오는 5월1일부터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향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화정역~상록회관 방향 지하차도만 정상 운영한다.

농성교차로의 상록회관~화정역 양방향 좌회전과 화정역~백운광장 방향 우회전도 금지된다.

광주시는 광주세우리병원 인근에 임시교차로를 설치해 광천사거리 또는 대남대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우회토록 하고 임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군부로의 주차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공회의소 앞에서 정차하던 지원56번 시내버스 정류장도 서석고 입구로 옮겨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농성광장 일부 차로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촌사거리와 화정사거리 한진 서광주지사 앞 사거리에서 미리 우회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야간공사 병행 등 공기단축방안을 강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재개장 앞둔 가축시장 방역. 지난달 경기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이 재개장 됐다. 재개장을 하루 앞둔 충남 공주가축시장에서 24일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학의 자유' 헌법명시 청원운동에 교사들 반발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국민청원운동 움직임에 보이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사학 재단들은 사학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정정임금 납부 책임부터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5년 기준 광주 사립학교 법정정임금 납부율이 평균 13.7%에 그쳐 사학재단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불모로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고 최근 3년간 저발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61건에 달한다"며 "헌법에 사학의 자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책임

과 의무를 다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오는 28일 국민청원 정책설명회에 사립학교 직원과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선학교는 30명, 중·고·병설학교는 50명 이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청원 서명인원도 100명에서 200명까지 할당했다"며 "경제동원에 교사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사학의 자유 헌법명시 청원운동은 사립학교 이사장

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교원과 직원의 서명을 강요하고 행사에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박근혜정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집단이 사학이었다"며 "사학의 자유를 부르짖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유를 쟁취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에 사학의 자유를 명시하는 국민청원운동 정책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